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 149 (07671) •전화 : 02-4977-888 •전송 : 02-4970-444 •날짜: 2024년 8월 27일(화)
•담당: 박병연 조직쟁의국장(010-2399-3362), 손종명 조직국장(010-5288-5577), 강문식 집행위원장(010-5894-1155)
•이메일 : kptuorg@gmail.com

음폐수 불법반입, 노동자 보복해고, 가스 폭발 참사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반복되는 파행운영!
우범기 전주시장, 최금락 태영건설 대표
국정감사 증인 채택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8월 28일(수) 오후 1시 40분

■ 장소 : 국회소통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정상화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기자회견 식순

- 여는 발언 : 공공운수노조 김선종 부위원장
- 투쟁 발언 : 민주노총 전북본부 이민경 본부장(전주리싸이클링타운 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 현장(해고자) 발언 : 전북평등지부 전주리싸이클링타운분회 이태성 분회장
- 공동주최 국회의원 발언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

1. 정론보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언론노동자들께 연대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태영건설을 비롯한 4개 건설사가 민자투자사업(BTO)으로 운영 중인 전주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작년에 논란이 되었던 타지역 음폐수 무단 처리, 올해 1월에는 보복해고라고 볼 수밖에 없는 노동조합 조합원 11명에 대한 집단해고, 5월에는 1명이 사망하고 4명의 전신화상자가 발생한 가스폭발 중대재해까지 파행적 운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파행 운영의 책임은 주무관청으로서 관리감독을 방기하고 있는

전주시와 해당 시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태영건설에 있습니다. 태영건설은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지분 52.5%를 확보하고 있는 실질적 지배기업입니다. 태영건설을 비롯한 운영사들은 수익 추구를 목적으로 타 지역의 음폐수를 불법적으로 반입하여 처리했고, 전주시는 이를 묵인했습니다. 불법적 음폐수 반입 사업에 대해 문제제기한 노동조합 조합원 11명은 올해 1월 1일 운영사 변경을 이유로 전원 해고됐으며, 전주시는 해고 직후인 1월 9일 음폐수 반입 사업을 승인하면서 운영사의 불법적 돈벌이를 용인했습니다. 과도한 음폐수 반입은 5월 2일, 전주리싸이클링타운 가스 폭발 중대재해로 이어졌습니다.

4. 이에 공공운수노조와 전주리싸이클링타운 공대위는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정상화와 우범기 전주시장, 최금락 태영건설 대표 국정감사 증인 채택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10,000명 이상의 시민이 동참했을 정도로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문제에 대한 공분이 확인됐으며,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할 때입니다. 국회가 나서서 사회기반시설의 운영 정상화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보복해고 당한 해고자들을 현장으로 돌려보내고,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을 파행으로 내몬 전주시와 태영건설 등 운영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회기반 시설이 그 본연에 역할에 충실하고 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관련 정부 부처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6.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첨부 :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집단해고/중대재해 사건 개요 1부, 발언문 1부. 끝.

[첨부 1 :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집단해고/중대재해 사건 개요]

■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집단해고, 중대재해 등 주요 경과

2023년

- 6월 28일, 전북민중행동, 리싸이클링타운 사용자 인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
- 7월 6일, 전북민중행동-전북환경운동연합, 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 반입 중단 촉구 기자회견
- 7월 18일, 전북민중행동-전북환경운동연합, 리싸이클링타운 사업권 환수 촉구 기자회견
- 7월 19일, 전주시, 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 반입 중단
- 10월 17일, (주)에코비트워터, 2024년 1월부터 (주)성우건설로 주관운영사가 변경됨을 노동조합에
통보
- 10월 말, 성우건설(주),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현장 내에 입사 지원 공고 게시(~11.10)
- 11월 20일,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 15명 신규채용 서류 성우건설(주)에 제출
- 12월 15일, 성우건설(주),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와의 면담에서 조합원 11명 채용하지 않겠다고
통보
- 12월 20일, 성우건설(주), 기존에 신규채용 합격 통보한 조합원 4명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이유로
신규채용 취소를 통보했으나, 기자회견 이후 이를 번복하고 채용하겠다고 알림. 해
당 조합원들은 12월 21일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 신규채용을 빌미로 한 노동조합
탈퇴 회유 의심.

2024년

- 1월 1일, 성우건설(주),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 시작
(주)에코비트워터, 조합원 11명 원격지 발령
- 1월 5일,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주), 전주시에 4개 회사가 공동수급으로 시설 운영하겠다는 계획
제출(리싸이클링 제2024-04호)
- 1월 9일, 전주시, 리싸이클링타운 외부 음폐수 재반입 승인
- 1월 18일, 노동조합,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 2월 1일, 노동조합,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주시,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출자회사 4개 사가 공동운영한다는 내용으로 운영사 변경
승인
- 2월 20일, 노동조합한승우 시의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운동 돌입
- 4월 11일, 전북지방노동행위위원회, 부당해고 인정, 부당노동행위 불인정
- 4월 22일, 노동조합, 감사원 공익 감사청구(청구인 2,883명)
- 5월 2일, 전주리싸이클링타운 가스 폭발 중대재해 발생. 5명 중상.
- 5월 9일, 고용노동부전주시청,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작업중지 명령
- 5월 21일, 성우건설(주), 부당해고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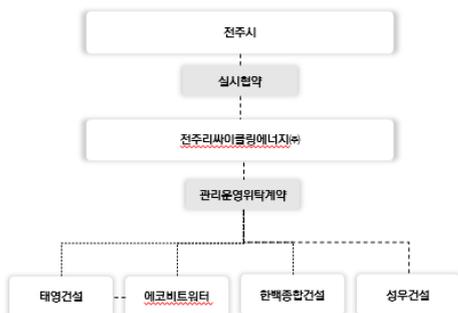
- 5월 28일,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고용노동부에 작업중지 해제 신청
- 5월 31일, 고용노동부전주지청, 작업중지 해제심의위원회에서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작업중지 해제 불승인
- 6월 7일, 고용노동부전주지청,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작업중지 해제 승인
- 6월 8일,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시설 재가동
- 6월 18일, 재해 노동자 1명 사망
- 6월 26일, 리싸이클링타운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 7월 09일, 리싸이클링타운 공대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전주시장 및 태영건설 고발
- 7월 18일, 감사원, 감사 개시 결정
- 8월 07일, 중앙노동위원회, 초심 결정 번복
- 8월 19일, 에코비트워터·성우건설, 전주시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 용역 입찰 참여

■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주요 현안 및 문제

I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 현황

-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전주시에서 발생한 음식물 및 재활용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현재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폐기물관리법, 환경오염시설법 상 전주시장을 대표자로 하여 설치를 승인받은 **생활폐기물** 처분 시설임.
-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사는 특수목적법인인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주)이고, 2016년부터 2036년까지 20년간 관리운영권을 보장받고 있음.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주)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재차 **태영건설을 대표수탁자**로 하고 태영건설, 에코비트워터, 한백종합건설, 성우건설 4개 회사가 구성된 공동수급체(이하 태영건설 컨소시엄)에 맡겼음.
- 공동수급체의 주요 의사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운영위원회는 지분비율로 의결권을 가짐. **태영건설이 지분의 과반을 갖고 있어 실질적인 지배기업**임.



제2조 (공동수급체의 지분비율 및 의무범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하 "구성원")의 운영지분율은 아래와 같다.

태영건설	한백종합건설	성우건설	TSK	계
52.5%	25%	12.5%	10.0%	100.0%

- 태영건설은 공동수급계약을 통해 대표수탁자와 실 운영사가 상이한 구조를 만들면서 권한은 행사

하되 책임은 회피하고 있음. 이로 인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노동자 집단 해고 역시 이 구조에서 발생한 문제임. 태영건설은 공동수급체 안에서 실 운영사를 자유롭게 변경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태영건설의 주장대로라면 직접고용원칙을 명시한 근로기준법을 비롯 우리 사회가 쌓아온 노동법리를 무너뜨리는 것임.

II

전주중합리싸이클링타운의 비정상 운영

-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가 수 년 째 무단으로 음폐수를 반입해 처리하고 수익을 거둬왔던 실상이 2023년 7월에 노동조합의 내부고발로 공개된 바 있음. 이 때 반입된 음폐수는 **생활폐기물이 아닌** 타 권역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임. 현행 전주시 폐기물 조례에는 사업장폐기물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조문이 없어 사업장폐기물 반입은 법 위반임.
- 리싸이클링타운의 공정은 폐기물 반입부터 하수처리장 처리수 연계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음. 따라서 음폐수가 과다 반입되면 음폐수의 소화조 체류 시간이 짧아지고 소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의 생슬러지가 슬러지 저류조로 반입되면서, 후단 공정에 문제가 발생함.
- 실제 음폐수 반입이 본격화된 2019년에는 52주 중 38주 간 하수처리장 연계수 수질이 보증기준을 초과했음.

13.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연계처리수 수리관리설계기준 및 관리설계기준 초과횟수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300톤/일) 발생 음폐수 연계처리 기준

- BOD : 부하량 3,000kg/day

- SS : 부하량 1,500kg/day

○ 연계처리 기준(부하량) 초과횟수('23년 상반기 기준)

항 목	'16	'17	'18	'19	'20	'21	'22	'23	비 고
BOD	0	3	14	31	15	12	5	0	
SS	0	4	10	38	19	4	10	1	

- 시설의 비정상적 운영의 결과 악취 피해도 심각해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복합악취 수준은 「악취방지법」 과 실시협약 상 보증기준을 70배 이상 상회함.
- 하지만 전주시는 수질 및 악취 기준 초과에도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임.

III

내부고발 이후 이루어진 보복해고

- 전주시는 노동조합의 내부고발 직후인 2023년 7월 19일 자로 타 권역 음폐수 반입을 중단시킴.
- 2023년 10월 17일에 태영건설 컨소시엄 측은 2024년 1월 1일 자로 주관운영사를 (주)에코비트워

터에서 (주)성우건설로 변경하겠다고 통보함.

-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11명은 고용승계를 거부당하고 원격지 발령을 받게 됨.
- 내부고발 노동자들이 해고된 직후인 2024년 1월 9일에 전주시는 타 권역 음폐수 반입을 재승인함.

4.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 반입 논란 이후 경과(2023년 8월 중단 이후)

- 2023. 7. 19. : 음폐수 반입 일시 중지
- 2023. 8. 22. : 음폐수 최소 필요량(35톤/일) 반입 승인
- 2023. 9. 21. : 음폐수 반입 관련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 2023. 10. 20. : 음폐수 반입 운영원가 재검토 용역 발주
- 2023. 11. 10. : 음폐수 반입 관련 자문위원회 1차 회의 개최
- 2023. 12. 20. : 음폐수 반입 운영원가 재검토 용역 완료
- 2024. 1. 9. : 음폐수 반입 관련 자문위원회 2차 회의 개최

[음폐수 적정반입량(121톤-150톤) 확정 및 반입 추진]

- 또한,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사용하는 ‘주관운영사’라는 용어는 실시협약, 관리운영계약 등에 존재하지 않는 용어로, 운영사 변경을 승인했다는 전주시의 공문에서 변경 전 운영사는 ‘태영건설, 한백종합건설, 성우건설, 에코비트워터’이고, 변경 후 운영사도 ‘태영건설, 한백종합건설, 성우건설, 에코비트워터’로 동일함. 행정상으로 변경된 실체가 없음에도 전주시는 조합원 해고를 위해 운영사가 변경된 것처럼 꾸미고 있음.
- 전주시는 사후 승인(2024년 2월 1일)을 불사하며 태영건설 측에 해고의 명분을 부여함.

2.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 승인 요청건에 대하여 실시협약 제42조(유지관리 및 운영계약)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영사 변경을 승인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승 인 일 : 2024년 2월 1일

나. 승인내용 : 운영사 변경

당 초	변 경
【운영능력 평가결과(2012.4.23.)】 에코비트워터	태영건설
【관리운영계약서(2014.8.14.)】 태영건설, 한백종합건설, 성우건설, 에코비트워터	한백종합건설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서 승인(2017.10.19.)】 태영건설, 하도급 2개사	성우건설
	에코비트워터

IV

5.2 폭발참사에 이르게 된 경과

- 성우건설은 도로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본금 50억 원 규모의 지역 업체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경험이 없으며 2019년 1월부터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된 바 있고, 2023년 감사에서 감사인(도원회계법인)이 한정 의견 표명함.
- 노동조합, 시의회, 시민사회단체는 운영 경험이 없는 성우건설의 시설 운영이 파행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해왔음.

- 결국 5월 2일에 메탄의 폭발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는 중대재해가 발생함.
- 재해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폭발 사고에 앞서 운영사가 음폐수를 최대 용량 반입하도록 지시했다고 폭로했음. 실제 올해 리사이클링타운 음폐수 반입량은 1월 1,227톤에서 4월 3,629톤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함. 작년 8월 이후 중단되었던 타 권역 음폐수도 올해 1월부터 재반입되었음.

합계 : 인수량(톤)	열 레이블								
행 레이블	경기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총합계
2023-08-01							469.85		469.85
2023-09-01							1038.27		1038.27
2023-10-01							541.39		541.39
2023-12-01							620.04		620.04
2024-01-01		271.11		201.19			754.92		1227.22
2024-02-01	443.22	550.35	24.45				865.98	80.03	1964.03
2024-03-01	1048.77	50.85	49.86	76.65		151.41	1025.16	179.65	2582.35
2024-04-01	1680.89	330.49	127.24	204.08		39.15	1246.62		3628.47
2024-05-01	52.28	51.45		26.34		100.92	207.33		438.32
2024-06-01	720.67	69.47		493.24	132.7	53.34	1185.9		2655.32
총합계	3945.83	1323.72	201.55	1001.5	132.7	344.82	7955.46	259.68	15165.26

- 음폐수 과다반입은 소화되지 못한 생슬러지가 소화슬러지 저류조로 이동하면서, 메탄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장소인 저류조에서 메탄이 발생하게 만든 원인임. 시설 지하에 메탄이 존재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은 성우건설 측도 인정하는 바임(5.3. 성우건설 기자회견 : “지하 공간은 메탄 가스가 있으면 안되는 공간”).
- 또한 노동조합은 스테인레스 배관이 있던 자리에 청호스를 사용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던 바 있음. 전주시는 시설 배관 재질이 교체된 것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나 이는 거짓말로 확인 됨.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지침서 상 이송배관은 “스테인리스 등 내식성 및 내구성이 있는 재질의 배관을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1. 해당시설 설계 시 스테인리스 배관을 사용해야 하는 설계기준이 있는지 여부

- '12년 정부고시* 당시 배관재질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음.
 - * 전주시 고시 제2012-09호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참고2>
- ※ (참고) 시설 준공 이후 제정된 기술지침서* 상 이송배관과 관련, 스테인리스 등 내식성 및 내구성이 있는 재질의 배관을 사용하도록 규정
 - * 통합처리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기술지침서, 2017.12 <참고 3>

V

종합

- 지난 수 년 간 리사이클링타운이 파행 운영된 것은 전주시의 방조와 묵인, 관리감독 부재에 의한 것임. 리사이클링타운 시설에서 복합악취 배출 기준을 70배 이상 초과(2023년 환경영향조사)하는 등 환경 기준 위반이 이어져 오고 있지만 전주시는 회사에 법률과 실시협약이 정한 과징금 및 손해배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를 방치하였음. 결국 피해가 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인근 주민들에게 전가되어 왔음.

- 여기에 민간사업자의 수익 추구적 운영은 시설의 기능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였음.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다 반입한 음폐수는 폭발사고를 야기하였고, 하수처리장에 부하를 주고 있음. 또한 시민들에게 전주시가 전국 폐수처리장이냐는 조롱과 멸시 속에서 자괴감을 안겨주었음.
- 음폐수 문제를 내부고발했던 노동자들은 보복해고당했고, 노동자들이 해고당하자마자 음폐수는 재반입되기 시작했으며, 폭발 참사로 이어짐.
- 불의를 목격한 내부자가 용기를 내어 이를 외부에 알리면 불이익을 당하며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이 한국사회에서 반복되어 온 관행임. 리사이클링타운에서도 이와 같은 부당한 관행이 반복되고 있음. 이 관행의 고리를 끊어야 함.

여는 발언

공공운수노조 김선종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선종입니다.

우리 공공운수노조에는 해고 사업장이 많습니다. 경북 울진에 있는 한울원자력발전소에서 해고된 조합원 4명은 2년 째 복직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쟁 사업장도 많습니다. 서울도시가스의 가스 검침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3년 가까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과 전주시만큼 악랄한 사업장은 많지 않습니다. 이들은 새해벽두부터 노동자 11명을 집단해고했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타 지역 음폐수 무단처리에 대해 문제제기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표적해고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서는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전주시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공이 책임져야 할 사업장입니다. 그러한 사업장에서 집단해고가 자행되고, 중대재해로 사람이 죽어가는 동안, 전주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공공성을 지키는 거녕 중요한 공공의 영역을 민간기업에게 넘겨준 후, 관리감독조차 방기한 채 집단해고와 중대재해를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공운수노조는 사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누리는 날을 꿈꾸며 투쟁하는 노동조합입니다.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해고노동자 동지들이 원칙으로 복직하고, 전주시의 폐기물 처리업무 사업이 외주화와 민영화를 넘어 다시금 공공의 책임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노조의 핵심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공성 확대, 노동권 보장이라는 가치가 보편적인 가치이기에 10,289명의 시민들이 <전주시장 우범기/태영건설 대표이사 국정감사 증인 소환 촉구 서명운동>에 함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조는 이러한 시민들의 뜻과 함께할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도 시민들의 뜻을 들어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전북평등지부 전주리싸이클링타운분회 동지들의 투쟁이 승리하는 그 날까지 더욱 힘차게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발언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이민경 본부장

전주 리싸이클링 타운에서 벌어진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폭발참사의 책임자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금락 태영대표를 국감에 서게 해주십시오!

전주시에는 리싸이클링 타운이라는 음식물 및 재활용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전주 시민의 재산이지만 그 운영을 민간 기업에게 맡겨져 파행 운영되어온 지 수년이 되었고 이를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 온 우리 11명의 노동자들이 지난 1월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부당한 해고와 민간운영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끌어온 투쟁의 시간이 벌써 8개월이 되어갑니다.

이런 상황에 지난 5월 2일, 리싸이클링 타운에서는 대형 폭발사고가 일어나게 되었고 5명의 부상자 중 1명은 이미 목숨을 잃었습니다. 숙련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경험도 전무한 민간기업에게 맡긴, 어찌면 예정된 사고였습니다. 전주시에 누차 위험을 이야기했고, 반드시 공정 과정이 위험하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반복했지만 전주시의 태만과 그저 이익을 내기 위해 눈먼 민간기업이 만들어낸 참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전주시는 제대로 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띄어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내기 위해 다른 지역의 음폐수를 수없이 가져다 처리를 했으며 발암 물질을 일으키는 폐기물들을 방치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노동조합의 내부고발로 타지역 음폐수 과다 반입문제가 알려지게 되었고 2024년 1월 이를 고발한 우리 조합원들이 전원 해고 당했습니다. 그리고 1월 9일 다시 타 권역 음폐수를 반입하게 되었습니다. 1월 1200여톤이었던 음폐수가 4월 3600여톤으로 그것도 타지역 음폐수량만 1700여톤 되었습니다. 시설이 견딜 수 없는 만큼의 양을 처리하는데도 전주시가 이를 지적하거나 감독하기는커녕 거짓 해명과 자료 은폐에만 급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명의 노동자들의 해고로 대두된 전주 리싸이클링 타운의 문제점은 단순한 해고의 문제를 넘어 민간기업과 전주시의 유착관계, 사회 기반시설의 공공성을 훼손하여 노동자,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사회 전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이라는 미명하

에 태양건설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전주시가 지어야 할 책임을 방기하는 이런 상황은 단순히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민간기업이 공공의 영역에서 돈벌이를 하기 위해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을 것이며 이를 눈감아주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금락 태양 건설 대표를 철저히 조사하여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폐기물 순환의 공공성을 되찾는 첫 발을 떼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현장 발언

전북평등지부 전주리싸이클링타운분회 이태성 분회장(해고노동자)

2023년 12월 31일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서 일했던 11명의 노동자들은 지난 8년 동안 일했던 직장에서 쫓겨나 차디찬 도로 위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239일째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이라고 말하는 음식물처리장에서 하루 12시간 장시간 노동과 상상하기도 힘든 악취와 유해가스를 노동자들은 입과 코로 마셔가며 하루를 견디어가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운영사가 변경되는 동안 회사만 변경되었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고용 승계가 되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사측은 단체협약을 위반해가며 보복성 인사조치를 감행했고 조합원들만 원적지 발령으로 왕복 3시간 넘는 거리로 발령을 했으며,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악의적 행동을 했습니다.

사측은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짓밟고, 노동 기본권을 짓밟는 파렴치한 짓을 했습니다.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들은 불법을 자행하며 전국의 음폐수를 무단 반입해 배를 채우기 바빴고, 이를 문제 삼은 조합원들만 계획적으로 부당해고를 시켰습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사회기반시설입니다. 전주시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임에도 전국의 음폐수가 무단반입처리되어 사측의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음에도 실시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주무관청인 전주시는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하고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렇게 자격도 안되고 능력도 안되는 성우건설이라는 곳에서 2024년 1월 운영을 하면서 지난 5월 2일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서 폭파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움을 넘어 비통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서 일어난 폭발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중대재해입니다. 노동자가 죽었고 전신화상을 입은 노동자들은 앞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재해를 입은 노동자와 현장에서 쫓겨 난 해고 노동자가 더 분노스러운 것은 전주시청과 작업지시를 한 운영사 책임자의 강경한 처벌이 아직도 진행되지 않다는 것에 하루 하루가 더욱 고통스럽다는 것 일겁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하루 하루 고통 받아야 합니까? 이런 전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해고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재해자들은 하루하루 고통의 절규 끝에 정상적인 삶은 무너졌습니다.

해고자 11명은 살고 싶습니다.

저희는 죽지 않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전주시의 편법과 불통행정 전주시는 지금이라도 행정을 바로 세우고,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을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이 전주시민들을 위한 공공재로 막대한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시민들을 위해! 시민들을 위한! 필수공공시설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노동자가 출근해서 고용불안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되어야 합니다.

음폐수 불법반입, 노동자 보복하고, 폭발참사…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금락 태영건설 대표에게 리싸이클링타운 파행 운영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태영건설 등이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운영중인 전주시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입니다. 이곳에서 11명의 노동자가 집단해고를 당했고, 지난 5월 2일에는 폭발참사가 발생해 1명이 목숨을 잃고 4명이 요양중입니다.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발생한 폭발참사는 태영건설이 노동자를 집단해고할 때부터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해고당한 노동자들은 태영건설이 타권역 사업장폐기물 음폐수를 불법 반입하고 있다고 공익제보한 이들입니다. 태영건설은 오로지 돈벌이를 위해서 음폐수를 반입했습니다. 태영건설은 리싸이클링타운에서 음폐수를 이용해 생산한 바이오가스 중 1/3을 허공에 날려버리고 있었고 일부 발전기는 가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폐수는 유기물이 제거되지 않아 수질기준을 초과한 채 하수처리장으로 방류되었습니다. 시설에서 발생한 악취물질도 법적 기준치의 70배를 초과해 노동자와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렇게 리싸이클링타운은 자원을 순환하기는커녕 자원을 훼손하는 시설로 운영되어왔습니다.

노동자들의 공익제보에 돌아온 답은 보복해고였습니다. 태영건설은 운영사를 변경한다는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조합원들만 고용승계를 거부했고 올해 1월 1일자로 이들에게 강원도, 경기도 등으로 원격지 발령을 냈습니다. 전주시는 태영건설의 보복해고에 문제가 없다며 이들을 비호했습니다.

폭발 참사의 진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태영건설은 노동자들의 공익제보에 2023년 7월 19일자로 허둥지둥 음폐수 반입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해고당하자마자 1월 9일부터 음폐수 불법 반입을 재개했습니다. 리싸이클링타운에 반입된 타권역 사업장폐기물 음폐수는 올해 4월 2,381톤까지 늘어났습니다. 부적절한 음폐수 반입은 메탄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장소에서 메탄을 발생시켰고 폭발 참사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벌어진 파행운영과 보복해고, 중대재해의 책임은 우범기 전주시장, 태

영건설 최금락 대표에게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리사이클링타운 운영을 정상화해달라는 서명에 10,289명이 동참하며 많은 시민들이 국회의 역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리사이클링타운 보복해고와 중대재해를 의제로 삼고 우범기 시장, 최금락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리사이클링타운에서 벌어진 파행운영의 실상을 낱알이 드러내고, 자원순환시설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규명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는 '공동수급체'를 악용한 고용의무 회피를 원천 차단하는 보완 입법에 조속히 나서야 합니다. 태영건설은 자신을 대표수탁자로 하고 공동수급계약(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여 발주처(전주시)의 승인을 얻었으나, 별도의 이면계약을 통해 고용의 책임을 다른 수급사에게 넘겨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련 판례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태영건설의 주장대로라면 대기업이 페이퍼컴퍼니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뒤 고용, 교섭, 안전보건 등의 책임을 페이퍼컴퍼니로 떠넘기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직접고용원칙을 명시한 근로기준법을 비롯 우리사회가 쌓아온 노동법리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리사이클링타운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자원순환의 공공성을 되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 첫번째 단추는 해고된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국회와 관련 정부 부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 주십시오.

2024년 8월 28일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진보당 정혜경 의원,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전북본부, 전주리사이클링타운운영정상화외해고자복직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6.15공동선언 실천전북본부,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기본소득당전북도당,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전북지부, 노동당전북도당,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북지부,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시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북지부,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이석규민주노동열사기념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전북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북도연합, 전북건강과생명을 지키는사람들,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교육연대,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오월동지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정의당전북특별자치도당, 진보광장, 진보당전북특별자치도당·전주시당,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평등교육 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군산·익산·전주, 평화와통일을위한YMCA만인회)